

투데이 칼럼

탄핵 정국 속 한국 패싱 우려

취임을 앞두고 첫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문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탄핵 정국인 한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측근인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에게도 대북 특사 임무를 맡기며 북미 대화에는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면 반기겠다고 말했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원하면 취임 전이라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종전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북 직접 대화 가능성도 수시로 내비치고 있다.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레넬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2020년엔 미국 고위 관련 인사 중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면,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국내 정치적 상황을 보완하려면 약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 특임대사를 통해 북한과의 직거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복규
논설위원

의 목소리가 거의 전달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올해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각종 무역 제재를 받는 데다 대외원조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정치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의 의미를 짚어보아야 한다. 88서울 올림픽과 제13대 대선을 코앞에 둔 1987년 11월 29일, 아부다비를 출발해 방북으로 가던 KAL 858기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돌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당시 폭파 음의자로 지목된 김현희가 바레인에서 검거돼 서울

로 압송되고, 사건 발생 47일 만에 자신이 여객기를 폭파했다고 시인한다. 남조선 측의 두 개 조선 책동과 올림픽 단독 개최 책동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기 1대를 폭파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른바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미국에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마침내 2008년, 북한이 연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

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 미국 내 기류가 워바뀐 결정적 계기는 2017년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이었다. 국제공항에서 북한이 팽독성 신경작용제를 얼굴에 발라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또 관광객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사망 사건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여론에 화기를 막았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와중에도 북핵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방북한 중국 특사가 귀국할 때까지 발표를 미뤘다. 송타오 대북 특사가 별 소득 없이 귀국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에 대한 최고 압박을 선언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온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다가올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과 함께 쿠바, 이란, 시리아가 올라 있다.

사설

월소득 228만원 기초연금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올랐는데,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불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보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백세시대 유산소 근력운동

겨울철 영하의 추위를 피해 실내로 운동 장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강도가 세고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고층 랜드마크인 서울의 63빌딩과 롯데월드타워는 물론 인천의 포스코타워에서도 ‘수직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만큼 관심도 높다. ‘계단 오르기’는 하체 뿐 아니라 복부와 팔도 움직여야 하는 고강도 전신운동이다. 몸무게 70kg인 남성이 10분간 계단을 오르면 소모되는 열량은 86kcal 정도다. 같은 조건의 걷기 47min에 비해 높다. ‘계단 오르기’는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계단 오르기’를 통해 전체적인 근육량이 늘어지면 기초대사량 증가와 지구력·균형 감각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잠깐씩만 해도 체력 개선은 물론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단 오르기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모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다는 통계도 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9%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장마비, 심부전, 뇌졸중 등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단 오르기’는 처음부터 긴 시간 도전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무릎, 발목, 척추 건강이 좋지 않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금물이다. 특히 ‘계단 내려가기’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5배로 올라간다. ‘계단 내려가기’는 3배의 올라가기보다 높고 근육통이 생기기 쉽다. 계단으로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를 권장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취임식 사전 연습하는 미 해병 군악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 서쪽에서 미 해병대 군악대 ‘더 프레지던트 오운(The President’s Ow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연습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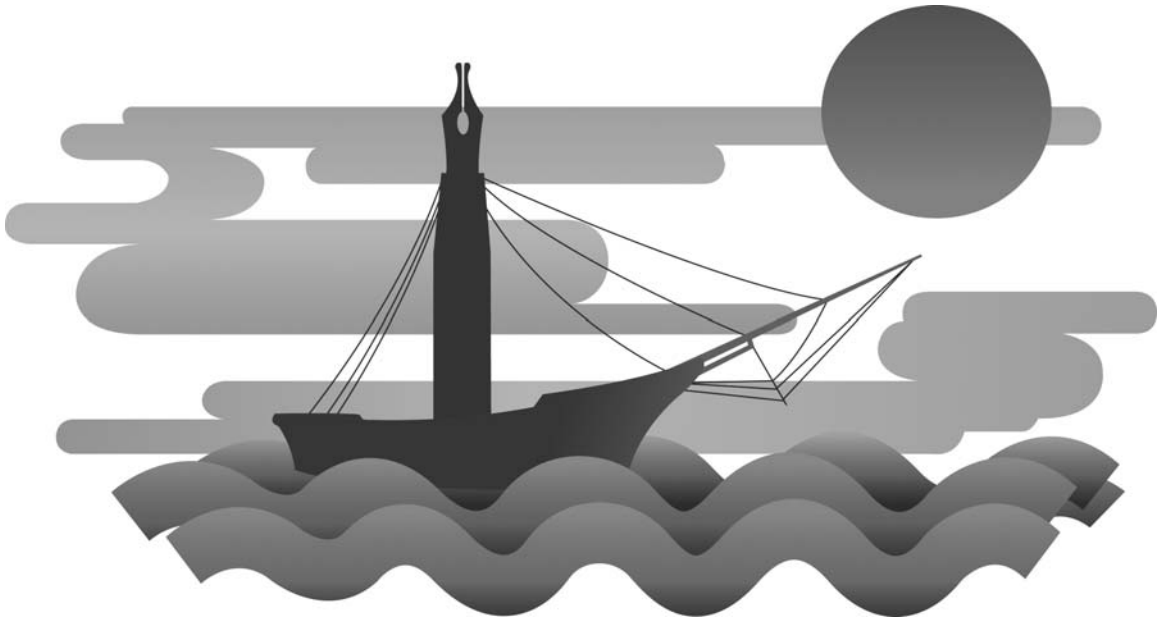
크로아티아 현 대통령, 대선 결선 투표서 승리



친러 성향의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